

## 식민지시기 검열과 오늘의 한국문학연구

한만수\*

- I. 들어가며
- II. 검열을 고려하는 문학연구를 위하여
  - 1. 연구대상의 문제- 차선본 확정의 필요성
  - 2. 연구방법의 문제- 국어학, 고전문학과의 협동연구 필요성
- III. 나오며

### 【국문초록】

식민지시기 한국문학은 ‘쓴 것’이 아니라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검열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떤 작품도 발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아래 한국문학을 연구하고자 할 때 현재의 연구경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첫째, 다양한 板本들을 비교하여 ‘쓰고자했던 것’에 좀더 가까운 次善本 확정작업이 필요하다. 한국현대문학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충실치 못한 부문이지만, 검열의 요인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언론학 사회학 법학 등과의 학제적 연구는 물론이고, 한국어문학 내부의 3개 세부전공(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의 벽을 넘어서 협동연구를 진

---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행해야 한다. 검열기준의 다양한 금지어들은 국어학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그리고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작가들이 동원했던 다양한 상호텍스트성(주로 고전작품을 활용한)에 대해서는 고전문학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인접학문과의 학제적 작업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해 막상 국어국문학 내부 세부전공 간의 협동연구는 부진한 상황이어서 아쉽다.

주제어 : 식민지시기 한국문학, 검열, 학제적 연구, 판본 비교

## I. 들어가며

필자는 식민지시기 한국에서 산출된 텍스트들은 단순히 ‘쓴 것’이 아니라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모든 텍스트는 검열을 통과해야만 발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예의 언어’로밖에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화자의 의도가 숨겨지거나 왜곡되는, 또는 아예 발화되지 않거나 지배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 검열의 소주체로 전락해버리는(주체와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대응양상이 나타나는 바, 이 시기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화된 것들을 실제의 발화 그대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 뒤틀림에 대해서, 심지어는 침묵으로 변해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학의 영역은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억눌린 상황 속에서의 발화에 유리하기도 했으며, 그런 만큼 해석 역시 이런 발화맥락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sup>1)</sup> 필자의 판단으

1) 뒤틀리거나 침묵으로 바뀐 발화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글을 참조.

로는 이런 독법이 이 시기 한국문학 이해에 기여할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sup>2)</sup> 우리가 근대로 편입되는 시기에 작동한 이런 역학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확인한다면,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우리의 지향점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한민족문학회의 학술대회 「일제 어문정책하 ‘조선어문학’ 자료에 대한 오늘의 시각」의 발표를 위해 쓰게 되었다.<sup>3)</sup> 이 학술대회의 취지에 부응하여 문학검열연구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좀더 실제적인 문제를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으로 나눠 살핀다. 계속 달라지는 검열행위 때문에 그 결과로서의 텍스트 또한 다양해 지므로 어떤 텍스트를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차선분’의 확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는 좀 개괄적인 서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고식적인 국어학과 전문학·현대문학의 삼분법을 벗어나는 일은 그 자체로서도 충분한 의의가 있겠지만, 문학검열연구를 위해서도 절실한 일임을 몇몇

---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 『대동문화연구』5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년 9월, pp.45-67; 「1930년대 검열기준의 구성원리와 작동기제」, 『한국어문학연구』47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년 8월, pp.279-309; 「1930년대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 『한국문화』, 서울대 규장각 한국문화연구원, 2007년 6월, pp.203-231.

- 2) 그 기여가능성은 문학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검열권력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나 식민주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검열에 의해 가장 엄격한 억압을 받은 결과 한국의 사회주의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지에 대해서는 박현호 「192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의 반·사회주의 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29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년 12월, pp.34-78)와 한기형(「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51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년 9월, pp.69-105) 참조.
- 3) 이 논문은 발표문 중에서 신문 문예면 형성을 다룬 2장을 삭제하는 등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일 토론과 질의를 통해 도움을 주신 조춘호 교수와 청중 질의자, 그리고 심사의견을 통해 수정의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사례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다.

## II. 검열을 고려하는 문학연구를 위하여

식민지시기 출판물이란 ‘쓴 것’이 아니라 단지 ‘쓸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면, ‘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또 ‘쓰고자 했던 것’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쓸 수 있었던 것’에 머물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묻게 된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쓸 수 없었던 것’(검열기준 등)과 ‘쓰도록 강제되었던 것’(동양론, 신체제론 등 식민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잘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sup>4)</sup> 그 후에는 식민권력이 제시했던 ‘금지’와 ‘권장’을 ‘쓸 수 있었던 것’(현존 텍스트)과 대조하고, 이 대조를 통해서 ‘쓰고자 했던 것’에 대한 추론 역시 가능해질 것이다. 이 작업을 거쳐야 여러 판본 중에서 ‘쓰고자했던 것’에 좀 더 근접하는 판본을 비정(比定)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며, 또한 작품, 작가, 문학사에 대한 평가에서도 단지 ‘쓸 수 있었던 것’만을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쓸 수 없었던 것’과 ‘쓰고자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으로서 한국문학을 이해하면서 ‘쓰고자했던 것’을 추정하고, ‘쓰고자했던 것’을 쓰지 못하게 됨으로써 한국문학에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4) 이렇게 본다면 동양주의, 신체제론, 만주문학 등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식민권력의 ‘권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식민권력의 ‘금지’를 막연하게 설정하면서 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적 인식에 머물던 그동안의 민족주의적 편향을 시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권장과 금지를 동시에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셈이다. 즉 당시 텍스트를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쓴 것’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또 하나의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문학 연구 경향은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문자화, 환금화, 순문예화라는 근대문학의 세 특성과 검열의 연관성 자체가 중요한 연구주제로 삼아야 할 것이겠거니와, 이 장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문제, 즉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국한하여 차례로 살피고자 한다.

### 1. 연구대상의 문제 - 차선본 확정의 필요성

근대문학은 물론 문자문학이 중심을 이룬다. 그런데 문자문학으로 이행하면서 판본이 고정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식민지시기 문학은 판본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구비문학에서의 각篇 또는 異本 문제와 유사한)가 생겨난다. 하지만 현대문학 연구자들은 인쇄된 문자텍스트의 시각적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원전확정 작업에 소홀한 연구관행 때문에 판본에 대한 의식이 대체로 미약하다.

식민지시기 문학텍스트들은 매우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sup>5)</sup> 같은 작품이라도 신문이나 잡지 등에 첫 발표한 판본과 나중에 작품집으로 묶일 때의 판본은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변화 중 상당부분은 검열과 관련된다. 매체와 시기에 따라서 검열의 기준이 달랐으므로 검열결과로서의 작품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sup>6)</sup> 인쇄되지 않은 정보들도 중요하다. 즉 검열본에 남아있

5) 한만수,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앞의 글) 및 최경희 「출판물로서의 근대문학과 텍스트의 불확정성」(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식민지 검열체제의 역사적 성격” 학술대회 자료집, 2004년 12월) 참조. 이 단락을, 논의의 전개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대체로 위 두 논문의 문제의식을 정리한 것이다.

6) 물론 이는 실제로 검열결과에 의해 바뀐 경우도 있고, 검열을 의식하여 미리 저자나 편집자가 바꾼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앞의 경우는 실물증거를 찾

는 검열관의 갖가지 육필들(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검열본 잡지의 경우),<sup>7)</sup> 검열에 대비하여 작가 스스로 작품을 이리저리 고친 흔적들(심훈의 육필원고 『그날이 오면』의 경우) 또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다. 검열관의 육필은 ‘쓸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그리고 작가의 다양한 육필은 그 결과로서 작품이 어떻게 조정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각각 제공한다. 따라서 이 시기 작품의 다양한 판본(육필을 포함하여)을 확인하는 일은 검열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물론 이는 검열연구뿐만 아니라 이 시기 모든 문자텍스트 연구에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sup>8)</sup>

‘쓰고자 했던 것’에 접근해가고자 했을 때, 시기와 매체와 작자에 따라 다양한 검열기준이 적용된 탓에 다양한 판본이 존재함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귀납적 작업에 주로 의존하는 셈이니, 귀납의 자료 즉 ‘금지’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이형태들이 풍부할수록 결론의 타당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식민지시기 문학 연구자들의 판본의식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본에 따른 작품의 개작을 살피는 일부 논문을 제외하고는 판본비판이 소홀한

---

아내면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입증이 상당히 복잡하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 7) 활자화된 텍스트뿐만 아니라 육필 흔적 또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최경희(「출판물로서의 근대문학과 텍스트의 불확정성」, 앞의 글)가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 8) 김철의 『바로잡은 「무정」』(문학동네, 2003년)은 이런 판본비교가 얼마나 절실한지, 또 부당하게 외면해온 일인지를 알려주는 노작이다. 이 책은 그와 동시에, 판본비교가 얼마나 품이 많이 들면서도 공식적 ‘연구업적’으로는 인색하게 평가되는 일인지도 알려준다. 여섯 사람이 2년 여의 작업을 거쳤지만, 요즘의 연구업적 평가 시스템에 따르면 과연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 유감스럽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런 작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개별 연구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연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단지, 홍정선 팀이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로 한 국문학의 정전 확정 작업에 나선 바, 작업량에 비해 연구기간과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안타까운 대로, 그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편이며, 부정확한 자료인 영인본이나 전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  
우도 적지 않다. 현재의 현대문학 연구관행으로 본다면 다양한 판  
본의 존재는 연구의 가치를 높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연구의 신뢰  
성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이 다양한 판본 중에서 어떤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  
가. 최경희는 이 모든 판본을 복수의 정본으로 삼아야 식민지시  
기 문학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9)</sup> 검열제도 하  
에서 산출된 다양한 텍스트는 다양한 검열상황 속에서의 다양한  
문학적 대응이므로, 하나의 텍스트로 연구대상을 확정짓는 것 자  
체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 다양한 판본의 대조를 통해 의미를 찾  
아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sup>10)</sup> 식민지시기 한국문학의 경우  
서구문학과는 달리 원본확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아니 불가능하기  
까지 하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정이 이리함에도  
이 시기 작품들은 판본비교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  
고, 따라서 외국어 번역본도 저본이 불충실한 경우가 많으며, 그  
때문에 외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와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  
역시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sup>11)</sup> 또한 ‘텍스트의 불확정성’

9) 최경희, 위의 글 참조.

10) 문학검열연구는 ‘아직 원본이 아닌’ 다량의 텍스트를 긍정하고 이를 해명  
해야 한다는 이해령의 지적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갑옥 혹  
은 부재의 시간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학술발  
표회,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문학적 표상2」, 2008년 6월  
27일 발표자료집, p.46 참조.

11) 최경희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어두운 외국인 독자들의 경우 이런 식으  
로 검열에 의해 일부분이 왜곡된 텍스트를 아무런 판본의식 없이 번역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당혹한다고 전한다. 또한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는 강경애의 「인간문제」 번역을 위해 저본을 확정하고자 했으나 국내 연  
구에서 원본확정 작업이 없음을 발견하고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원본확정  
작업에 나섰다 고 한다. 「강경애의 『인간문제』 판본비교」, ‘조선문화연구  
회’ 정기발표회(2006년 7월 23일, 도쿄 와세다대학) 발표자료 pp.1-12 참  
조. 이런 문제는 실증주의적 연구에 대한 과잉비판에서 초래된, 실증적

이야말로 식민지시기 한국문학의 특성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외국인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으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다양한 판본들은 그저 아무 중심이 없는 다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 중에서 ‘쓰고자했던 것’<sup>12)</sup>에 더 가까운 텍스트는 분명히 존재한다. 비교적 검열의 억압이 미약했을 때 출판된 작품을 나중에 검열이 강화된 시점에 손질해 다시 발표했을 때, 두 판본을 동가치항으로 인정해야 할까? 또한 검열로 삭제되어 알아볼 수 없었던 작품을 추후에 복원했을 때,<sup>13)</sup> 두 판본 사이에 아무런 가치의 차이를 지니지 않는 것일까? 게다가 텍스트의 불확정

---

작업에 대한 과소평가와 관련되는 것이겠다.

- 12) ‘쓰고자 했던 것’이란 추상적으로는 설정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구체적 실상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해령이 ‘작가의 마음이나 텍스트에 흐릿한 편린으로나마 남아있을 것 같은 원본’(앞의 글 참조)의 존재에 집착하면 곤란하다고 말하는 까닭 중의 하나도, 심리의 차원인지 텍스트의 차원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에게 ‘쓰고자 했던 것’(심리적 차원의 ‘원본’)이 없다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검열자의 내면에도, 검열지침에도 금지의 ‘원본’이란 없다. 있는 것은, 당대 현실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검열자와 피검열자가 형성하는 판단,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되비치면서 형성된 ‘금지’와 ‘의도’의 像일 뿐이다.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텍스트 차원에서 ‘원본’에 가까운 것들이다. 이는 검열지침, 시대상황, 그리고 검열결과로서의 다양한 텍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관정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작가 내면에서 ‘쓰고자 했던 것’의 구체적 전모를 복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차원에서 금지하였던 것, 그리고 그 제도의 틈새를 활용하여 제시된 ‘의도’의 기미들을 찾아낼 수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 우리는 ‘쓰고자 했던 것’에 좀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의도가 당대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대 텍스트들은 쓰고자했던 것에 가까운 것과 먼 것들로 계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3) 필자는 붓질로 삭제된 강경애의 「소금」 마지막 부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도움을 얻어 복원한 바 있다. 「강경애 「소금」의 복사복원과 검열우회로서의 ‘나뉘쓰기」, 『한국문학연구』3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년 12월, pp.169-191 참조.

성만을 강조할 경우, 비전문인을 위한 텍스트(즉 교육용, 대중보급용, 해외번역용 텍스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작품에도 매우 많은 이본들이 존재하는 바, 이것들을 모두 텍스트로 삼아 교육하고 대중에 읽어달라고 권장하고 번역해야 할 것인가. 물론 최경희가 이런 지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텍스트의 불확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쓸 수 있었던 것’으로서의 다양한 판본들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쓰고자했던 것’에 더 가까운 텍스트를 선별하고, 그 중심성을 인정하면서도 각주 등을 통해서 다른 판본의 유의미한 정보(문자 또는 육필 등 다양한 이미지)들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럴 경우 더 중심성을 인정할 수 있는 텍스트는 차선본<sup>14)</sup> (또는 중심판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식민지시기 문학텍스트에서 검열 때문에 발생한 다양성과 중심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전문가들의 연구에서는 불확정성을 더 강조하고, 대중적 텍스트에서는 중심성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차선본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차선본을 확정하는 일은, 비단 문학연구뿐만 아니라 문학 교육이나 대중적 문학수용을 위해서도 또한 한국문학의 해외번역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각주가 달린 문학작품’, 또는 검열관의 ‘삭제’ 지시 필적이나 붓질삭제 흔적이 부록으로 함께 실린 문학작품<sup>15)</sup>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원본확정

14) 고전문학의 ‘선본(善本)’이라는 용어 대신에 ‘차선본’을 제안하는 까닭은, 텍스트의 불확정성을 함께 강조할 필요성 때문이다.

15) 삭제 지시는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 또한 앞서 살핀 바 「소금」의 경우, 복원된 결과를 차선본으로 제시하면서 복원 이전의 붓질자국 이미지를 보조텍스트로 보여주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 단지 잠정적으로만 가능한 식민지시기 한국문학텍스트의 특성을 시각인상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시기 문학연구는 연구대상의 확정부터가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검열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선본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연구방법의 문제 - 국어학, 고전문학과의 협동연구 필요성

검열이란 문학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며, 식민지시기에 국한되는 것도, 조선에서만 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역시 현재의 분과학문체계에서 벗어난 다각적인 협동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학제적 연구, 통시기적 연구, 그리고 일국적 차원을 벗어난 비교연구가 필수적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개략적으로나마 정리한 바 있으므로,<sup>16)</sup> 이 글에서는 학제적 연구 중에서

16)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비교연구의 필요성」, 『비교문학』41집, 한국비교문학회, 2007년 2월, pp.103-126. 단지 문학에서의 통시기적 연구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던 바, 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서술해둔다. 식민지시기 검열이 그 이후의 문학의 생산과 연구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예컨대 검열이 대폭 강화되었던 1930년대에 조선문학 전집이 대거 발간되면서 한국 근대 시문학의 정전이 형성된다는 점만 보더라도(심선옥, 「근대시의 초기 정전화 과정」, 박헌호 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제도』, 소명출판, 2008년, pp.323-360 참조), 식민지시기 검열의 영향력은 확인된다. 주로 시간적 분절에 의해 특정 시기만을 자신의 연구대상을 설정하는 행위의 연구관행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학사는 물론 이런 연구관행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문학사 서술이 검열을 문제의식으로 삼지 않고 있다(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검열상황을 개괄적인대로 비교적 예민하게 의식한 채로 쓴 거의 유일한 문학사이다). 또한 문학사서술은 편년체적 방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제 중심의 방식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그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검열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검열연구가 충실하게 진행된다면 한국문학사를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판단한다.

국어국문학의 영역을 주로 살피기로 한다.

한국어문학의 내부에서 각 세부전공 사이의 협동연구가 필요한 까닭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검열제도 자체에서부터 확인된다. 조선총독부의 검열기준은 부분주의와 맥락주의의 상보적 적용이었다.<sup>17)</sup>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부분주의 검열을 해석하기 위해서 국어학과 국문학의 협력이, 그리고 맥락주의 검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협력이 필요하다.

부분주의는 금지어와 강제어(또는 권장어)를 나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부분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학(특히 사회언어학)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검열기준에서는 ‘일본’ 대신에 ‘내지’라는 단어를 쓰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식민지(‘외지’)에 대한 포섭과 배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식민정책의 모순적 요구가 ‘은밀한 차별’의 언어로 표현되는 방식이다.<sup>18)</sup> 이에 대해 당시 작

- 
- 17) 한만수, 「1930년대 검열기준의 구성원리와 작동기제」(앞의 글) 참조. 필자는 이 글에서, 정근식·최경희가 제안한 ‘열거주의’(또는 예거주의)와 ‘표준주의’라는 용어를 수정 보완하여(위 논문의 각주 21번 참조) 부분주의와 맥락주의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이번 기회에 이전의 주장을 일부 보완하고자 한다. 맥락주의에 대한 이전의 설명에서는 작품의 문맥에 관한 것만을 논의했을 뿐 사회적 맥락에 관한 서술이 없었다. 검열기준이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음은 “출판물의 목적, 독자의 범위, 출판물의 발행부수 및 사회적 세력, 발행당시의 사회사정, 반포 구역, 불온개소의 분량”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검열해야 한다는 특수검열표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특수검열표준은 일반검열표준에 비해 매우 짧은 데다 추상적인 단어가 나열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다지 주목받지 않아왔지만, 일반검열표준의 세세한 규정을 실제로 적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활용되었다. 신문, 잡지, 단행본 등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또한 검열시기에 따라서 검열수준이 많이 달랐다는 통념을 뒷받침하는 문헌적 근거이기도 하다.
- 18) ‘내선일체’를 구호로 동화주의적 식민정책을 채택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차별을 시행해야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언어현상일 터이다. 즉 명백하게 차별적이어서는 곤란하므로(실제로 ‘요보’ 같은 경멸의 뜻이 명백한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검열관들은 일본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니시무라

가나 언론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대체로 1937년 이전까지 ‘내지’는 단지 권장어였을 뿐 ‘일본’을 금지하지는 않았던 바,<sup>19)</sup> 이 과도기에는 ‘내지’로 아예 ‘조선’을 가리키는가하면, ‘조선내지’<sup>20)</sup> ‘일본내지’ ‘중국내지’ ‘몽골내지’ 등의 다양한 복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sup>21)</sup>

‘은밀한 차별’의 언어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며, 그에 대해 문인과 언중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전통적인 지명 명명법에서 내부는 중심성을 외부는 주변성을 각각 갖는 것이었다면 (예컨대 ‘문안’과 ‘문밖’, ‘안골’과 ‘밖골’), ‘내지’라는 검열기준은 이를 거스를 것을 요구하는 방식인 바, 이렇게 중심과 주변이 전도되는 지명재편은 종래의 지명체계와 어떤 길항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졌을까. 또한 요즘 ‘미국 들어간다’는 식의 어법이 일상화된 데서 보이는 바, 안과 밖, 중심과 주변이 전도된 어법의 기원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안/밖의 가치전도는 그 지명체계를 사용하는 언중들에게 어떤 심상지리(또는 세계관)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일까.<sup>22)</sup> 금지어와 강제어(권장어) 목록은 내지/외

신타로(西村真太郎), 「序」(新庄祐治郎 書), 『朝鮮の併』, 警察協會, 1923년, p.12; 도키오 토우호우(釋尾東邦), 「時事數題」, 『朝鮮及滿洲』 390호, 1940년. 5월호 등) 은밀한 차별적 언어들을 만들어냈을 터이다.

- 19) ‘일본’이라는 단어를 금지하고 ‘내지’를 사용하라는 명시적 규정은 1939년(「편집에 관한 희망 및 그 지시사항」, 『조광』, 39년 9월호) 처음 확인되지만, 유봉영의 회고에 따르면 1937년부터 강제되었다고 한다(「독립운동 초지 급허 몸담은 「조선 36년」」, 한국신문연구소 편, 『언론비화 50편』, 1973년, p.56).
- 20) 심지어는 검열주무부서인 경무국 도서과장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가 공식석상에서 ‘조선내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朝鮮事情』, 재단법인 경찰협회 후쿠오카 지부 발행, 1926년 3월).
- 21) 물론 식민말기에는 ‘내지’는 당연히 ‘일본’을 가리키는 단어로 정착되는데, 같은 시기에 ‘일본군’은 ‘황군’ ‘아군’으로 표기되기에 이른다.
- 22) ‘내지/외지’는 대체로 일본의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점령과정에서, 중화주의의 화이론(華夷論)을 변용하여 만들어낸 단어인 듯하다. 그런데 검열기

지에 국한되지 않는 바, 이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어학(내지/ 외지의 경우라면 특히 地名學)과의 협동연구는 필요하다.<sup>23)</sup>

준에 명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별 저항 없이(아니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훨씬 더 많은 근대적 단어들은 물론 일본의 번역을 거쳐 수입된 서구 근대적 개념들이다. 이것들이 어떤 동일화와 차별의 논리를 산출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식민지조선에서 대중화되는가에 대한 개념사 연구의 성과가 충분히 진행된다면, 검열연구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터이다. 검열기준의 금지어/강제어 시스템이란 자연스럽게 수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강제라고 본다면, 이 둘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3) 국어학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대목은 비단 금지어 및 강제어(또는 권장어) 목록에 국한되지 않는다. 첫째, 근대 한국어학의 형성에서 일본의 영향은 어떠한가의 문제이다. 이연숙, 이준식, 이해령, 미쓰이 다카시 등의 광목할만한 연구가 제기되면서 민족주의적 연구경향을 균열시키고 있지만, 더 해명되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열과 관련지어 말하자면, 다음의 몇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예컨대 총독부가 고급관료들을 위해 조선정세에 관한 각종 번역물을 제공하면서 하급 관료들에게는 조선어 배우기를 장려하는 등 피식민어(조선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에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점은 흥미롭다. 위의 조선정세 번역물 연구가 검열연구에 도움이 되는 까닭은 검열로 인해 조선어 문건은 남아있지 않은 것들 중에서 일본어 번역은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정근식, 『구한말 일본인의 조선어교육과 통역경찰의 형성』, 『한국문학연구』 32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년 6월, pp.7-56 참조). 이런 자료들에서 문학관련 문건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이미 언론학자 정진석이 비슷한 사례로 삭제된 문학작품을 적지 않게 찾아냈지만 아직 국문학계의 연구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 교육’에 관한 연구도 검열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인을 위한)조선어교재의 편찬, 조선어 교육 및 평가도구의 마련, 조선어 문법 및 표기법의 정립 등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당대의 국어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교재와 조선인을 위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한 이 과정에 재조 일본인과 조선인 연구자들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가 등의 문제이다. 조선어문학 연구 및 교육의 근대화과정에서 식민권력의 개입이라는 좀더 넓은 층위에서의 검열 연구를 위해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둘째, 식민시기를 통틀어 대체로 유지되었던 이중언어 상황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 문학연구 전반에 좋은 참조가 되겠지만, 검열연구에도 그러하다. 예컨대, 문학검열의 측면에서는 일본인/일본어 작품과 조선인/조선어작품의 차별적 검열정책을 통해서 야기되는 효과 중의 하나 역시 ‘차별의 자연화’에 있지 않을까 하는 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어학 영역의 이중언어 정책에 관한 연구는 좋은 참조

부분주의는 금지어와 강제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검열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피검열자 쪽에서도 교묘한 우회적 언어들 곧바로 마련해갔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검열당국은 맥락주의로써 이를 보충하고자 했으니, 검열을 우회하여 출판하기 위해서는 맥락주의 검열기준마저 통과해야 했다. 이를 위해 당대의 작가가 동원한 방식 중 하나는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상당수는 고전의 인용을 택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태준은 단편 「涇江冷」(1938)에서 신채호의 한시 「白頭山途中」을 인용하면서 그를 애도한다.<sup>24)</sup> 물론 신채호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을 인물인데다가 그 작품 또한 ‘불온’한 것이었으므로, 이태준은 한시, 민요, 주역의 爻辭 등 다양한 텍스트들을 동원하고 교묘하게 조합하여 이를 감춘다. 한시를 한글로만 표기하면서 또 이를 노랫소리의 음차 형식으로 바꿔버림으로써 무슨 내용인지를 짐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노랫소리로 표기하기 위해서 노래 부를 기생이라는 인물을 만들고, 신채호를 상기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여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니, 검열은 결국 인물, 작품 배경, 플롯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셈이다.<sup>25)</sup> 이태준은 꽤 많

가 될 것이다. 셋째, 검열관 연구에도 국어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문학과 어학 전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총독부의 조선어 교육에도 적지 않게 기여했던 니시무라 신타로(박광현,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에 관한 고찰」, 『한국문학연구』 32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년 6월, pp.93-127 참조) 같은 검열관 연구에는 국어학분야의 연구를 참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24) 이 작품이 신채호의 한시임을 이승수는 이미 10여 년 전에 밝힌 바 있으나(『한국문학의 공간 탐색1. 평양』, 『한국학논총』 133집, 1994, pp.119-120) 아직 현대문학전공자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이승수는 이를 검열의 문맥과 관련하여 해석하지는 못하였다. 이 두 현상은 세부전공 사이의 학문적 장벽 때문에 생긴 문제일 터이다.
- 25) 한만수, 「이태준의 「패강냉」에 나타난 검열우회에 대하여」, 『상허학회』 19집, 상허학회, 2007.2. pp.311-340 참조.

은 작품에서 고전을 인용하고 있거니와, 이는 상고적 취향을 가진 당시 몇몇 작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고전작품들이 해당 텍스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는, 해당 작품의 해석에도 중요한 문제이겠거니와, 검열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대문학 전공자들이 고전문학 전공자에게 도움 받아야 할 것은 판본대조 작업에서이다. 앞서 살핀 바대로 현대문학에서도 판본비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이본 문제의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고전문학의 도움 또한 절실할 수밖에 없다.<sup>26)</sup>

요컨대, 현재의 국어학-고전문학-현대문학의 삼분법적 세부전공의 연구체제에만 의존한다면 문학검열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연구하기 어렵다. 이 시기 문학을 ‘쓸 수 있었던 것’으로서 인식하고, ‘쓸 수 없는 것’을 우회하려던 노력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쓸 수 없었던 것’의 사회언어학적 의미에 대해서 국어학과의 공동작업이, 그리고 고전인용을 통한 검열 우회 노력에 대해서는 고전문학과의 공동작업이 각각 필요하다. 물론 이는 방법론적 차원에 불과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서 보자면, 근대 이전과 이후에 한국어문학이 겪은 커다란 변화의 양상과 의미를 식민권력과 관련 양상 속에서 탐색하기 위해서 세부전공 사이의 협력은 절실하다.

26) 이밖에도 고전-현대문학 협동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보아 두 가지를 더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문자화과정에서 근대적 검열이 작동되었다면, 그 이전의 구술(및 문자)문학에서의 검열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대조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환금성을 가짐으로써 자본에 의한 검열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면, 환금성을 갖기 이전과 그 이후의 문학을 대조하여 文士의식과 賣文의식을 비교하는 작업, 또 자본과 권력이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검열과 그 이후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Ⅲ. 나오며

지금까지 검열을 염두에 두고 식민지시기 문학을 바라볼 때 어떤 시야가 포착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서는 오늘의 연구방식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필자가 제시한 변화의 요구들은 문학검열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아온 요인을 나열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연구대상의 확정을 위해서는 ‘차선본’의 확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판본대조 작업은 현대문학연구에서 대체로 미흡한 분야이다. 또한 검열연구는 학제적, 통시기적 연구, 그리고 일국적 차원을 떠난 지역연구를 요구하는 바, 한국어문학 연구의 주류적 경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세 방식의 연구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언론학과 국문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사상 음악 미술 풍속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검열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 미국 대만 연구자들과 공동학술대회 역시 개최되었으며, 해방 이후의 반공주의 검열에 대한 연구가 태동되었다.<sup>27)</sup> 단지 국어국문학 세부 전공 사이의 협동연구는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소통이 가장 미흡한 셈이다.

문학검열 연구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다.<sup>28)</sup> 예컨대 ‘이 대목은 검열을 의식한 우회적 기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도를 넘기 어렵다. 심지어는 작가가 생전에 남긴 회고를 증거로 든다고 하더라도, 특히 그 회고가 해방 이후의 것이 라면, 그대로만 신뢰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문학영역에서 검열연구

27) 한만수,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비교연구의 필요성」(앞의 글), pp.108-112 참조.

28) 물론 삭제된 텍스트의 과학적 복원작업이라면 거의 이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검열의 영향을 추론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러하다.

가 미진했던(그리고 최근 활성화된 검열연구가 주로 제도적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중요한 까닭 중 하나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증할 수 없음이란 문학연구의 일반적 속성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자연과학과는 달리 유일한(잠정적으로나마) 해석의 권위를 고정할 수 없다는 점이 문학연구의 특성 아닌가. 작가가 살아있어서 해석자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심급의 권위를 지니지는 못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아닌가. 유일한 해석의 율이 아니라 논리적 타당성을 지닌 여러 개의 해석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학검열연구 역시 그러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새삼스럽기까지 한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무엇인가. 문학검열 연구는 자칫하면 식민지기 작품의 특정한 표현들을 탄압과 저항으로 설명해온 고식적 연구경향들(‘어둠’ ‘겨울’은 식민지적 억압이요 ‘새벽’ ‘봄’은 해방을 상징한다는 식)과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거가 부족한 채로 과잉해석을 낳을 우려가 크고,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해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문학해석의 다양성은 사라져 버린다. 자칫하면 검열결정론에 빠지게 될 가능성까지 없지 않다.

특히 고식적인 탄압-저항론과 혼동되기 쉬운 것이 검열우회에 관한 연구이다. 하지만 검열우회 연구는 은유 해석에 의해 ‘쓰고자 했던 것’을 추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열이 작품 속의 인물 사건 배경의 설정, 그리고 문장과 문단 구성에 영향 미친 바까지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고식적 탄압-저항론과는 구분된다.<sup>29)</sup> 또한 막연한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입증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개연성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따라서 설혹 은

29) 문학작품에서의 검열우회 기법은 시간적, 공간적, 작품의 각종 기법을 활용한 우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옛날 저기’의 이야기로 우회하는 방식, 그리고 문학기법의 우회라면 상호텍스트성의 활용, ‘나뉘 쓰기’, 은유 등을 들 수 있다.

유 해석의 차원에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사뭇 다른 것이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문학검열연구는 단순히 ‘쓰고자 했던 것’을 재구하려는 것은 아니다. ‘쓰고자 했던 것’과 식민권력의 ‘금지 및 권장’이 충돌함으로써 이 시기 문학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가를 탐구하려는 것이며, 검열우회연구는 이 충돌에서 문인들이 고안해낸 다양한 기법들을 발견하고 평가하려는, 여러 검열연구 중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sup>30)</sup>

끝으로 문학검열연구의 기대효과를 필자의 작업을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매듭짓기로 한다. 첫째, 권력과 자본의 포위 속에서 문인은(또는 지식인은) 어떤 방식으로 발화하고 이 텍스트들은 독자에게 어떻게 소통되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 이는 세계 보편의 문제이기도 한만큼, 식민지시기 한국의 경우 어떤 특징적 자질을 보이는가를 세계 학계에 제출하는 일도 의미 있을 터이다. 이를 통해 한국문학 연구가 일국적 제한성에서 벗어나면서, 해외 학계에서 한국학의 ‘게토화’ 현상<sup>31)</sup>을 완화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국가-자본검열이라는 문제들은 기존의 민족주의적 해석을 수정할 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국가-자본검열은 최근의 국사교과서 재검정 파동, 인터넷검열, 광고주 압박 운동 등에서 보듯이 현재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현재를 해석

30) 검열의 우회기법에 대한 고찰로는 필자의 「이태준의 「패강녕」에 나타난 검열우회에 대하여」(앞의 글); 「강경애 「소금」의 복자복원과 검열우회로서의 「나뉘쓰기」(앞의 글); 「1930년대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한국문화』, 서울대 규장각 한국문화연구원 2007. 6. pp.203-231) 등을 참조. 또한 ‘쓰고자 했던 것’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현호, 「192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의 반-사회주의 담론 연구」(앞의 글)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앞의 글) 등을 참조.

31) 앙드레 슈미트(Andre Schmid) ‘Korean Studies on the periphery and as a potential form or mediator in Korean-U.S. relations’,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제3회 국제학술대회 「한국/학의 근대성과 로컬리티」 발표논문, 2007년 11월 17일.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셋째, 문학검열연구의 성과는 통합교과적인 문학교육의 자료로서 유용하다. 이렇게 될 때 문학교육은 문학과 이웃 학문, 그리고 식민지시기와 오늘 사이의 관계성을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문학과 식민지시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어가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真太郎), 「序」(新庄祐治郎 書), 『朝鮮の倂』, 警察協會, 1923년.

도키오 토우호우(釋尾東邦), 「時事數題」, 『朝鮮及滿洲』 390호, 1940년 5월호.

『朝鮮事情』, 재단법인 경찰협회 후쿠오카 지부 발행, 1926년 3월.

「편집에 관한 희망 및 그 지시사항」, 『조광』, 1939년 9월호.

한국신문연구소 편, 『언론비화 50편』, 1973년.

### 2. 논문

박광현,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真太郎)에 관한 고찰」, 『한국문학연구』 32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년 6월, pp. 93-127.

박현호, 「192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의 반-사회주의 담론 연구」, 『한국

---

32) 자본 축적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결과, 국가-자본검열은 오늘날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국가보다는 자본이, 일국 적 차원보다는 세계적 차원이, 금지보다는 권장이 각각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물론 훨씬 자세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 문학연구』 29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년 12월, pp.34-78.
-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강경애의 『인간문제』 판본비교」, ‘조선 문화연구회’ 정기발표회(2006년 7월 23일, 도쿄 와세다대학) 발표자료 pp.1-12.
- 이승수, 「한국문학의 공간 탐색1. 평양」, 『한국학논총』 133집, 1994, pp.119-120.
- 최경희 「출판물로서의 근대문학과 텍스트의 불확정성」,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식민지 검열체제의 역사적 성격” 학술대회 자료집, 2004년 12월.
- 이혜령,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학술발표회,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 문학적 표상2」, 2008년 6월 27일 발표자료집, p.46.
-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51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년 9월, pp.69-105.
- 한만수,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 『대동문화연구』 51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년 9월.
- \_\_\_\_\_, 「강경애 「소금」의 복자복원과 검열우회로서의 ‘나뉘쓰기」, 『한국문학연구』3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년 12월, pp.169-191.
- \_\_\_\_\_,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비교연구의 필요성」, 『비교문학』41집, 한국비교문학회, 2007년 2월, pp.103-126.
- \_\_\_\_\_, 「이태준의 「패강녕」에 나타난 검열우회에 대하여」, 『상허학보』19집, 상허학회, 2007년 2월, pp.311-340.
- \_\_\_\_\_, 「1930년대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 『한국문화』, 서울대 규장각 한국문화연구원, 2007년 6월, pp.203-231.

### 3. 단행본

- 심선옥, 「근대시의 초기 정전화 과정」, 박현호 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제도』, 소명출판, 2008년, pp.323-360.

Censorship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Studies on  
Korean Literature Today

Han, Man-Soo

Korean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as perceived as not 'things that are written' but 'things that could be writte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no piece of literature could be published without passing the censorship. With that in mi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new cognitive levels that could be captured when studying Korean literature and the issues involved with the trends in today's researches as well as resolving them.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stay away from regarding literature as text when studying literature. In other words, we need to compare 'what couldn't be written' (censorship standards) with 'what could be written' (existing text) in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what was intended to write'. This will reveal the fact that a writer's fear of the censorship did not only affect his choice of words or phrases but also the underlying structure of his literature including stage settings, plots, characters, and whatnot. Research targets and research methodologies need to be changed in order to study literature censorships. First, we need to compare different original copies to determine research target that are closer to 'what was intended to write'. While this idea may not have been practiced widely in the studies on modern Korean literature, it is an urgent task given the censorship factors. Second, interdisciplinary studies are required. This includes interdisciplinary studies across journalism, sociology, and law as well as collaborative studies that overcome the barriers among the three majors (Korean language, classic literature, modern literature) within Korean Literature. Words that were banned as per the censorship standard and the various intertextuality (mostly leveraging classic literature) that writers used to bypass the censorship need to be resolved through joint

studies by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and classic literature, respectively.

Key words : Korean literature in Japanese colonial period, Censorship,  
Interdisciplinary study, Comparison of texts

한만수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2 동국대학교  
전화번호: 02-2260-3155  
전자우편: hanms58@hanmail.net

이 논문은	2008년 11월 13일 투고하여
	2008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12월 30일 간행함